
환경규제 개선과제

2022.12

목 차

대기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1
2.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3
3. 대기관리권역법상 배출허용총량 추가할당 기준 마련5
4.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별 이전 거래 허용6
5.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완화7
6. 굴뚝원격감시체계(TMS) 활용유예기간 확대9
7. 중소·중견기업의 TMS 설치 부담 완화11
8. TMS 부착 및 운영·관리기준 관련 중복처벌 완화 ...13
9. 온실가스 배출 할당 산정방식 개선14
10.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16

화학물질

11. 국외 평가 완료된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자료 인정 ...17
12.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절차 간소화18

목 차

- 13. 개발원료 신규화학물질 상용화시 화학물질 사후 등록 허용 ..19
- 14. 화학물질 등록유예 종료 후 조건부 등록 인정20
- 1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기준 개선 ..21
- 16.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및 현장점검 규정 일원화23

폐기물 · 순환자원

- 17. 폐기물 재활용 물질의 화학물질 등록 적용 제외 ..24
- 18. 폐기물 재활용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5
- 19.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26
- 20. 폐기물 수입신고서 첨부서류로 CIP 수입계약서도 인정28
- 21. 소량 배출 지정폐기물 보관기관 완화30

기타

- 22.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형사처벌 규정 개선31
- 23. 폐수 유기물 관리지표 업종별 기준 마련33
- 24. 생태독성 배출 허용 평가시험종 다양화35
- 25. 환경규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장 현장 점검 개선37

□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관련 법률>

법률	규제 대상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5년 단위 주기적 강화) *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등 64종 -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도 배출량에 따른 부과금 부과
환경오염시설법 (‘15.12 제정, ‘17.1 시행)	19개 업종, 대기 및 수질 1·2종 사업장(연간 20톤 이상) * ‘17년부터 업종별 연차적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외부 환경영향이 목표수준을 만족하도록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
대기관리권역법 (‘19.4 제정, ‘20.4 시행)	총량관리사업장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SOx 4톤, NOx 4톤, TSP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산정 후 총량관리사업장별로 배출량 할당 및 배출량 이행 관리 * 관리물질 7종(총량관리 3종) - 총량관리사업장 TMS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오염시설법’상 허가배출기준 적용, ‘대기관리권역법’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부담 급증

- ‘대기환경보전법’은 ‘20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종전보다 평균 30% 강화

* 질소산화물(ppm) (종전) 20~530, (‘20.1) 10~250, (강화율) 28%,
황산화물(ppm) (종전) 10~540 (‘20.1) 10~250 (강화율) 32%,
먼지(mg/Sm³) (종전) 10~70 (‘20.1) 5~50 (강화율) 33%

- ‘환경오염시설법’은 업종별 BAT를 적용한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강화된 허가배출기준 적용

* 최대배출기준은 TMS 30분 데이터 중 이상값을 제외한 99% 신뢰도 구간 최고값이며, 30분 TMS 농도가 3번 연속 초과하면 기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의 70~80% 수준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전¹⁾

- ‘대기관리권역법’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에 따라 연도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사업장별로 5년 단위로 연간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할당

<오염물질별·권역별 대기오염총량 할당결과>

(단위: 톤, %)

			'19년 배출량	초기연도('20년)		최종연도('24년)		'19년대비 삭감률(%)
				할당량	'19년대비	할당량	'19년대비	
오염 물질별	계		373,217	357,685	95.8%	228,453	61.2%	38.8
	질소산화물(NOx)		263,054	240,679	91.5%	158,673	60.3%	39.7
	황산화물(SOx)		105,952	112,271	106.0%	66,048	62.3%	37.7
	먼지		4,211	4,735	112.4%	3,732	88.6%	11.4
권역별	계	NOx	263,054	240,679	91.5%	158,673	60.3%	39.7
		SOx	105,952	112,272	106.0%	66,049	62.3%	37.7
	중부권	NOx	117,733	101,352	86.1%	72,294	61.4%	38.6
		SOx	36,296	41,014	113.0%	19,251	53.0%	47.0
	남부권	NOx	60,734	51,684	85.1%	35,480	58.4%	41.6
		SOx	26,969	29,615	109.8%	19,205	71.2%	28.8
	동남권	NOx	84,587	87,643	103.6%	50,899	60.2%	39.8
		SOx	42,688	41,643	97.6%	27,593	64.6%	35.4

*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20.10.19.)

- 기업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매년 배출농도를 낮추어야 하며, 배출농도 저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생산량을 줄여야 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통합허가를 받았음에도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해 농도규제와 총량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되어 이중 부담

□ 건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배출허용기준 완화
-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허가 면제

1) 공성용 외, 「통합법 시행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허가조건 평가 및 개선방안」, KEI 정책보고서 2019-01

□ 관련법령 : 대기환경관리법 제9조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대기총량제가 전국 4대권역으로 확대되면서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제1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 대기환경개선 목표, 배출원별 배출량, 대기오염도, 배출원별·행정구역별 배출허용총량, 저감계획, 총량관리 오염물질 할당 기준, 직전 계획 평가 등 포함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 대기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권역의 기업에게 할당량을 분배

* 배출총량 관리는 권역 내 1종~3종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

- 배출허용총량 관리가 사업장별 5년 단위로 연간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할당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

<권역별 총량관리사업장 배출 허용 총량>

(단위 : 톤)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NOx	SOx	NOx	SOx	NOx	SOx	NOx	SOx	NOx	SOx
수도권	39,885	13,620	39,352	13,166	38,266	12,865	35,061	11,983	31,157	11,100
중부권	135,562	50,771	123,633	44,251	112,588	37,683	98,520	29,822	87,038	23,254
동남권	112,098	55,750	102,779	51,287	93,461	46,824	80,924	40,920	74,726	36,488
남부권	60,722	40,503	59,639	36,580	52,447	29,927	48,707	26,151	45,038	22,218

* (출처)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환경부, 2020)

- 대기오염 총량 지역의 배출허용총량은 사업장 기초조사(19.6월~7월 실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별 배출정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배출 허용총량 과소 산정에 따른 할당량 부족 발생

-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설정시 기존 배출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장의 배출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배출계수를 적용해 배출허용총량을 설정
- 총량관리사업장은 과소산정으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경우, 배출허용총량 추가로 받아야 하나 사업장 소재 지자체의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밖에 없으며, 지자체 배출허용총량도 부족한 상황
- 일부 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총량 과소산정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 설비 투자비용 증가로 어려움 발생
- 또한, 설비투자를 하였음에도 배출허용총량을 급격히 낮추기도 어려워 배출초과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현장애로사례

- A사는 1종사업장으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당시 SOx 측정 면제 사업장이었으나, 대기관리권역법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에 포함
-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설정시 기존 배출자료가 없어 사업장 배출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배출계수를 적용해 배출총량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SOx 배출량 측정을 위해 TMS를 설치한 결과 실제 배출량보다 배출허용총량 과소 설정으로 기업 부담 증가
- 또한, 인접 권역 배출거래도 허용되지 않고, 권역내 배출 총량도 부족해 '24년에는 300억원 이상 배출초과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상황

□ 건의내용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 ‘대기관리권역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기본계획 변경 필요가 인정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과소산정된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

□ 관련법령: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시행으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지역배출허용총량 내에서 사업장별로 5년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
- 불황 등으로 생산활동이 감소한 업종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배출허용총량을 작게 할당받았으나, 업황이 호전되어 생산활동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할 경우 총량초과 과징금을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배출허용총량도 삭감
- 신·증설 시설은 지역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이 있는 경우에만 배출허용총량 추가할당이 가능하며, 여유분이 없는 경우 추가할당 불가

□ 건의내용

- 업황 변동이나 신·증설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기준 마련

□ 관련법령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1조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관리권역법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권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 권역별로 배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권의 이전을 동일권역 내로 제한
- 대기총량제가 배출권거래제도의 시장조성이나 활성화보다는 사업장총량 규제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 부담 증가
 - 중견기업 특성상 지역별로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다르게 설정
 - 권역별로 사업장이 위치한 경우 동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사업장이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이 발생할 경우 총량이 부족한 타 권역 다른 사업장에 총량 이전 불가로 인해 배출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 공장 이전·신설 등 시설투자 확대로 오염물질 총량이 추가 필요하나 권역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한정되어 있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거래가 권역내로 한정되어 있어 신규투자에 어려움 발생

□ 건의내용

-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별 이전 거래 허용
 - 특히, 인접 권역에 위치한 동일 사업자의 사업장 간 대기오염물질 총량 이전 허용

□ 관련법령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19조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오염물질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법'을 '17년부터 업종별로 시행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1종·2종 사업장이 대상이며, 업종별·오염물질별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총체적으로 관리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업종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철강, 비철, 유기화학	석유정제, 비료, 정밀, 유기화학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등
시행년도	'17~'20	'18~'21	'19~'22	'20~'23	'21~'24

* 신규사업장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 또한,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보다 '환경오염시설법'을 우선 적용
-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배출 농도 허용기준이 사업장별로 적용됨에 따라 대기농도 허용기준이 더욱 강화
- SO_x, NO_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허용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보다 2배 이상 강화되면서 대기농도 기준 이행에 대한 부담 가중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4)에 따라 총량제 적용지역이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되면서 해당권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대기농도와 총량이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이중규제로 어려움 가중

*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전국 77개 시·군

- 특히, 기존 1종·2종 사업장에 적용되던 배출농도특례 조항이 삭제되는 등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

<총량사업장 대상 특례 비교>

구분	수도권대기법('20.4.2 폐지)	대기관리권역법('20.4.3 시행)
농도특례	1종~3종 사업장 130% 완화	3종 사업장만 130% 완화

* (출처) 환경부

현장애로사례

- D사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준비 중으로 오염물질배출 기준 강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 오염물질별 모델링을 통해 사업장별로 허가배출기준이 결정되나 사업장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배출허용기준도 너무 낮아 기업이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건의내용

-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별 SO_x, NO_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완화
 - 사업장별 배출허용기준 산정 시 기업의견 반영을 통해 규제 이행 부담 최소화 필요
- 대기총량제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1종·2종 사업장은 농도특례 130% 적용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오염물질발생 1종~3종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설치하도록 명시
 - 또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4.3)으로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오염물질 총량 사업장은 TMS 부착을 의무화
 -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총량관리 인·허가 사업장이 TMS 부착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은 1년 이내에 부착완료, 부착완료 후 6개월 내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을 두고 있음(굴뚝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1.7)
- TMS 설치 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행정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
 - TMS 설치 이후 기업은 활용 유예기간동안 오염물질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야 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오염물질 허용기준 초과 시 배출부과금을 납부
- 특히, 활용유예기간 종료 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 농도가 갑자기 증가하게 될 경우 기업은 배출원인을 찾기 위해 공장가동률을 낮추거나 멈춰야 하는 상황 발생
 - TMS 설치 이후 기업이 규제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나 활용유예기간 6개월은 기업이 환경규제 이행을 준비하기에는 역부족

현장애로사례

- B사는 TMS 설치대상 사업장으로 '21년 10월에 설치 완료
- 설치 이후 4개월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5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NOx, SOx 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기 시작
- 자사는 초과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재 및 생산공정상에는 문제가 없어 현재 배출 초과 시 바로 공장가동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NOx, SOx 농도를 줄이고 있어 생산활동 피해 발생
- 사업장에서 TMS 적용 및 보완을 위해서는 활용유예기간 6개월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TMS 설비 업체 섭외 및 계약 만 최소 1개월 이상 소요)

□ 건의내용

- 중견·중소기업 TMS 설치 완료 후 활용유예기간 연장(6개월→1년)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 현황 및 문제점

-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가 또는 대행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음
-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행(‘21.10월)으로 ‘대기관리권역’이 확대(수도권→전국)되고 3가지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모든 굴뚝에 TMS 부착 의무화
 - * 질소산화물(연간 4톤), 황산화물(연간 4톤), 먼지(연간 0.2톤)
- TMS 부착 의무화로 설치 및 운영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해 재무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증가
 - 중소기업에 한해 TMS 설치·운영관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부담이 40%에 달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중견기업은 재무여력이 취약함에도 TMS 설치·운영관리비를 100% 자체 부담해야 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경영에 부담 가중

현장애로사례

- C사의 경우 TMS 설치비 30억원, 유지보수비용 포함 약 100억원의 자금 소요 예상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도 ‘대기관리권역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TMS 부착 의무 발생
 -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탄소중립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 등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TMS 부착 의무화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

□ 건의내용

- 중소·중견기업의 TMS 설치 부담 완화
 - TMS 설치 한시적 유예 또는 단계적 의무화
 - 보조금 지원 대상(現 중소 → 案 중소·중견) 및 보조금 확대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의 경우 TMS 설치 유예

□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90조, 제91조 92조, 제94조, 제95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36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오염물질 연간 10톤 이상 발생 1~3종 사업장에 TMS 부착을 의무화하고 부착 및 운영·관리기준 위반시 행정제재 및 형벌 부과
 - 행정제재로는 경고·조치명령·조업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과태료 부과 등이 있으며, 형벌로는 벌금·징역 또는 벌금 부과

<TMS 부착 운영·관리기준 위반시 행정제재 및 형벌 부과 현황>

	형벌		양벌 규정	행정제재
	징역	벌금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년	5천만원	○	경고, 조업정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부착 측정기기에 대한 행위 금지 위반 - 배출시설 가동 시 측정기기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측정기기 고의 훼손 행위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 정결과 작성 행위				경고, 조치명령, 조업 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과태료 2백만원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x	경고, 조치명령, 조업 정지, 과태료 2백만원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 한 조업정지명령 위반	1년	1천만원	○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조치명령 미이행		3백만원	○	

- 조업정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기업의 생산·납기차질→매출·이익 감소→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고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
- 이러한 과도한 형벌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여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 건의내용

- TMS 미부착 및 운용·관리기준 관련 형벌 규정 폐지

□ 관련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

□ 현황 및 문제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백만톤을 할당(2020.12)
 -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시 기준기간(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17년~'19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결정
 - 단, 자연재해·화재·시설교체 발생으로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연도가 있을 경우에는 기준기간에서 해당연도를 제외
-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외환경 및 경영환경에 따라 수주물량 취소 등 영업활동 중단이 되거나 회생절차기간 동안 생산활동이 급격히 줄어도 온실가스 기준기간에는 제외되지 않는 문제 발생
 - 생산량 감소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현저히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 평균에 산입되면 기업의 온실가스 할당량이 과소 책정될 수밖에 없음
 - 향후 영업활동이 정상화되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배출권 추가 구매비용 부담 확대
- 또한,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전력사용량도 산정에 포함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
 - 전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미 발전단계에서 산정하여 발전사에 할당하였음에도 또다시 전력 사용자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할당하는 것은 이중할당에 해당

- 최근 배출권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배출권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 증가
 - 특히 배출권 구매 여력이 미흡한 회생절차 졸업기업 등에는 막대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음
- * 탄소배출권(KAU21) 가격 : ('21.8월) 21,750원 → ('22.8월) 35,250원으로 상승 (한국거래소)

현장애로사례

- E사는 3차 계획기간의 기준기간인 '17~'19년 內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그 기간 생산 물량 감소에 따라 배출량이 대폭 감소하여 할당량이 과소 책정
- 이로 인해,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로 약 6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경영정상화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

□ 건의내용

- 기업회생절차 또는 대내외 경영환경 위축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연도는 기준기간 산정에서 제외
-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전력사용량은 제외

□ 관련법령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7조

□ 현황 및 문제점

- 배출권거래제 시행('15년)으로 정부는 매년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전력소비 절감유인 제고 명목으로 거래 대상에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포함해 운영
- 배출권거래 대상을 생산공정상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전기·열사용 등에 의한 간접배출도 포함해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
- 국내 주력산업은 간접배출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에 대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
 - * 산업별 직간접 배출량 중 간접배출량 비중 : 조립금속(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66.7%, 화학 39.3%, 철강 13.7%, 비금속(시멘트 등) 10.4%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촉진방안 연구」, '20.12월)
- 배출권거래 규제대상에 간접배출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 '21년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기후·환경요금을 추가부담하고 있어 기업부담 가중
- EU,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은 직접배출만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과 중국만 간접배출을 포함해 규제

□ 건의내용

- 배출거래제 규제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 관련법령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 현황 및 문제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엄격한 관리 및 화학물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모든 기존화학물질(1톤 이상) 등록을 의무화
 -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 정보 제출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가 있는 화학물질은 제출자료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
- 그러나 화학물질 등록 시 국외에서 평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제출자료가 있더라도 정부는 유해성 정보를 등록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
 - 국외 평가보고서에 공개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라 할지라도 기업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국외 평가보고서 요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실제로는 제출자료 생략 자체가 불가능
 - 또한 국외 평가보고서의 시험결과값을 기업에서 활용 시 지적재산권 침해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국외 소유자로부터 자료를 구매해야 하는 등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발생

□ 건의내용

- 국외에서 평가 완료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는 자료 제출 없이 인정
 - 국외 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유해성 정보에 대해서만 제출

□ 관련법령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개발을 위한 화학물질은 등록면제 확인 절차를 통해 등록면제가 가능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다품목 소량을 수입 또는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품목별로 등록면제 확인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증가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용도, 공정도, 화학물질안전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 또한 연구개발용 등록면제 승인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기업은 행정기관의 면제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연구개발 활동이 지연되는 문제 발생
 - 연구개발 특성상 빠른 시일내에 진행해야 함에도 환경공단 등 행정기관의 등록면제 승인이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연구개발 활동의 어려움으로 작용

현장애로사례

- F사는 자사 연구개발 및 시제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소량으로 필요하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해당물질 등록 면제를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
- 그러나 연구개발 등록면제 서류가 복잡하고 면제승인까지 3개월 이상 장시간 소요되고 있어 시제품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

□ 건의내용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면제 절차 간소화

□ 관련법령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

□ 현황 및 문제점

- '19. 1월부터 기업이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사전등록이 필요
 - 이에 따라 연구개발 용도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확인을 받았으나, 관련 연구가 완료되어 시장 출시, 상용화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개발 시 해당연구의 성공 여부나 완료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물질을 신규화학물질로 사전등록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음
 - 특히,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유해성 자료가 필요하나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는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 또한, 연구가 완료되고 상용화가 결정된 시점부터 시험자료 구비 등 등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최소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장출시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어려움이 있음

□ 건의내용

- 화학물질 연구개발을 통해 신규화학물질로 상용화할 경우에는 사후 등록을 허용

□ 관련법령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

□ 현황 및 문제점

- '19. 1월부터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화학물질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며, 등록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
 - * 유예기간 : 1천톤 이상('21.12.31), 100톤~1천톤 미만('24.12.31), 1톤~100톤 미만('30.12.31)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유예기간 만료 내 등록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물질 제조·수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활동의 부담으로 작용
 - 특히,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관련 자료 구매나 국내 화학물질 시험기관 부족 등 대외 환경에 따른 사유로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유예기간 내에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물질 제조·수입 중단 및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 증가
 - * 화학물질등록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건의내용

-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화학물질을 유예기간내에 등록이 지연될 경우 사후 등록을 허용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내용 중복에 따라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시행('21.4월)
 - 기업은 유해화학취급시설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취급시설 용량이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으로 증가, 기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 될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유해화학시설의 화학물질 규정 수량 기준이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별 수량에서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으로 변경되면서 수량 기준이 대폭 감소
 -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물질별로 제조·사용 수량과 보관·저장 수량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도입 이후 물질성상 규정 수량만 명시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현재 삭제)>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제조·사용 수량 (연간)	보관·저장 수량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 [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kg	200,000 kg
2	메틸히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kg	10,000 kg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성상	유해성 분류	규정 수량
고체	유해성 구분 없음	2,000kg
액체	유해성 구분 없음	400kg
기체	독성구분 1	5kg
	독성구분 2	5kg
	독성구분 3	100kg

- 화학물질 수량기준이 대폭 감소하면서 화학물질 보관·저장 규정수량보다 증가할 때마다 기업은 사고시나리오 도출 진행과 함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영업활동에 따라 화학물질이 규정수량보다 증가할 때 마다 반복적으로 인허가 진행을 해야 하는 행정업무 가중
- 특히,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이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 구분 없이 일괄적용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 반도체 등 특정업종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보관하고 있으나 물질 총합에 따라 총량 기준을 넘는 경우가 빈번해 인·허가를 위한 업무량이 증가

현장애로사례

- G사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 전 NaOH(액체) 보관 기준이 6,000kg이었으나,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이 400kg으로 대폭 낮아져 어려움이 발생
- 용량이 일정한 제조시설 및 저장탱크와 달리 보관시설은 보관량이 수시로 변경되며, 특히 대내외 이슈에 따라 기존 대비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입고되는 경우도 있음
- 수량 기준보다 초과할 때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 가중

□ 건의내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기준 완화
- 물질성상 기준을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로 구분
-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기준 확대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3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
 - 기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외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법’상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해야함
- 기업은 유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개별적으로 작성·제출해야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도 각각 수행해야 하는 등 중복규제로 인한 애로 발생
 - 개별 보고서 작성과 개별기관의 현장점검 대응을 위한 행정 및 비용부담 가중

□ 건의내용

-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통합 운영 필요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법’ 상 제출서류를 일원화하여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 관련법령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

□ 현황 및 문제점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화학물질등록을 의무화
 - 재활용하고자 하는 대상 폐기물(화학물질)이 공급망 내에서 이미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면제 가능
- 폐기물 및 재활용 또는 회수한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등록 적용 여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산업계 혼란 야기
 - 법규정 상 폐기물 자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적용제외 대상이나, 정부는 재활용 또는 회수되는 화학물질은 등록·신고 의무를 적용받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어 기업의 혼란만 가중
-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폐기물 발생 전 생애주기와 경로 확인이 어려워 해당물질이 공급망 내에서 기 등록 완료된 물질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건의내용

- 폐기물에서 재활용·회수한 물질이 등록 완료된 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면제확인대상으로 인정
 - 폐기물 재활용·회수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법으로 규정
- 기술개발에 따라 다양한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해지고 있으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유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에 한계

* (사례) 비산재 등 산업부산물을 탄소포집활용(CCU) 기술로 처리하여 생산한 탄산화물 등도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화 어려움

□ 건의안

- 폐기물 재활용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관련법령: 자원순환법 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이 인체 및 환경 무해성·경제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인정제도’ 운영 중

순환자원 인정기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준 모두 충족)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이하 경제성 기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 경제성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통상적 재활용 가능 여부, 유가성(有價性)과 유상거래 여부*, 시장수요 여부를 고려

* 가격조사자료, 실제 유통가격 조사, 거래명세서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된 실제 거래 가격(환경부, 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안), 2017.12)

경제성 기준 고려사항(시행규칙 제6조)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 경제성 기준을 유가성(有價性)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요가 있더라도 무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폐기물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구축 저해
- 실제로 순환자원 인정건수(465건) 중 왕겨 및 쌀겨(259건), 폐지류(115건), 폐합성고분자화합물(37건), 폐금속류(24건)가 94%를 차지하고 있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

* 그 외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식물성잔재물 13, 폐유리류 6, 무기성오니류 3, 분진류 3, 폐석고·폐석회 2, 폐목재류 1, 폐섬유류 1, 광재류 0, 폐사료 0(출처: 순환자원정보센터, '22. 9. 20 기준)

- 일반 제조업체에서 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다양한 사례 존재

<수요성(무상공급)으로 유가성을 대체할 수 있는 폐기물 예시>

폐기물	용도	폐기물	용도
1. 폐내화물 파분쇄물	벽돌제조 원료	4. 자투리, 분말유리	판유리, 유리제품 원료
2. 탈황석고	석고보드 원료	5. 주조제품의 불량품	제강공장 제품 원료
3. 임목폐기물 톱밥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6. 감귤박	사료 원료

* (출처) 김도완 외, 중간가공폐기물의 용어 및 순환자원인정기준 중 유가성 기준에 대한 소고, 「환경정책」 제30권 제2호 2022. 6

-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순환자원인정제도의 경제성 판단기준인 유가성 기준 합리화 필요

□ 건의내용

- (1안) 경제성 기준 고려사항인 유가성(有價性) 기준에 비유가성*도 포함하도록 수요성(需要性) 기준으로 개선

* 무상으로 공급되어 재활용 되는 경우 포함

- (2안) 유가성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필요

- 유상거래 실적의 경우 순환자원 인정 후 6개월 이내 실적을 제출허용
-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동종 물질의 유상거래도 유가성 실적으로 인정

□ 관련법령: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 별표 2

□ 현황 및 문제점

-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폐기물 수입신고제 시행 중
 - 수입신고 첨부서류로 수입계약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
- CIF 수입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수입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의 부담 급증
 - * CIP: 해상운임 및 해상적하보험료와 매수인인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
 - ** CIF: 해상운임 및 해상적하보험료가 포함된 매수인 지정항구까지의 가격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
- '20. 7월 폐지가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된 후 제지업체는 수입계약을 CIP에서 CIF로 변경함에 따라 물류비용 부담 가중

현장애로사례

- H사는 '20년 7월 이전 CIF 수입계약을 통해 부산항이나 광양항으로 입항 후 수도권 내륙에 거점을 둔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를 경유 편도운임 지불
- '20년 7월 이후 폐기물 수출입신고서에 CIF 수입계약만을 인정하고 있어 인천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인천항은 소수의 직항선사만 운항하는 관계로 선사선택이 어려움
- 납기는 부산 또는 해외에서 환적 후 입항하는 운항경로 때문에 최장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운항일정을 예측할 수가 없어 안정적인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적시에 원료를 공급할 수 없어 생산에 차질 발생.
- 납기가 긴급하여 CIF 부산항이나 CIF 광양항 조건으로 수입할 경우 선사의 요청에 의해 하역작업 후 공컨테이너 반납지를 부산이나 광양으로 요청될 경우 왕복운임을 지불해야 해 추가비용 발생

□ 건의안

- 폐기물 수입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CIF 수입계약서도 인정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이상일 경우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45일(일부 지정폐기물은 60일) 이상 사업장에서 보관할 수 없음
 - * 단, 관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지정 폐기물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은 1년 기간내 보관가능
-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배출은 지정폐기물 품목과 성질에 따라 배출량이 다르며,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배출량이 항상 정기적으로 발생되지도 않아 기업은 현실과 괴리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
 - 생산활동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정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여도 일정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량 대비 운반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

현장애로사례

- I사는 반도체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수기에는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많지만 비수기에는 배출량이 적음. 그러나 지정폐기물 수거는 배출량과 상관없이 45일 이내에 수거해 가고 있는 상황
- 지정폐기물의 품목 및 성상별로 배출량이 다름에도 보관기한 내에 별도 지정 운반차량을 통해 처리함에 따라 처리량 대비 운반비용에 대한 부담 가중

□ 건의내용

-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탄력적으로 운영
 -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경우 보관기간 연장

□ 관련법령 : 환경오염시설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부처 경제법률 조사 결과 형사처벌 항목이 '99년1,868개에서 '19년 10월말 기준 2,657개로 크게 증가(KERI 보도자료, '19.11.13)
-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위반시 시정명령·조업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에 징역형 등 형벌까지 부과
 -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은 제89조부터 제95조까지 벌칙조항인데, 여기에 규정된 범죄행위는 약 120여개 이상으로 조사

<환경 관련 주요 법률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부과>

	벌칙			행정제재
	징역형 또는 벌금	양벌규정	과태료	
환경오염시설법	5~7년 이하 징역 또는 5백~1억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 허가취소, 과징금
대기환경보전법	1~7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7천 이하 벌금	○	5백만원 이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 폐쇄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물환경보전법	1~7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7천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	2~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7천만원 이하 벌금	○	1백~1천만원 이하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처리금지, 시설폐쇄
소음진동관리법	6개월~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	2천만원 이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조업정지, 폐쇄, 과징금
화학물질관리법	6개월~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2억원 이하 벌금	○	천만원 이하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 이러한 과도한 형벌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기업가정신을 훼손하여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특히, 영업정지·조업정지의 경우 기업은 생산·납기 차질→매출·이익 감소→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적게는 수백명 협력사까지 하면 수천명 근로자의 생계가 달려있어 행정처분만으로도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며 정상적인 기업가라면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음

□ 건의내용

-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위반 시 인신을 구속하는 징역형 폐지하고 행정제재로 전환

□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현황 및 문제점

-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신규시설은 '20년부터, 기존 시설은 '22년부터 적용
 - '물환경보전법' 개정('19.10)에 따라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였으며, 총유기탄소량을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유기물질 종류에도 추가
 - 이에 따라, 기존 COD기준의 TMS를 설치한 사업장은 TOC 기준 TMS로 교체하여야 함
- 폐수 유기물 수질배출 허용기준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기업 부담 가중
 - 폐수 유기물 수질배출 허용기준 적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 따른 지역(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²⁾으로 구분하여 적용
 - 일부 제조업(제지업, 화학업종 등)의 경우 다른 업종 대비 높은 화학물질 사용을 하고 있으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별 일괄 적용으로 인해 기업이 규제 준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2)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I 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I 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V)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4) 특례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현장애로사례

- J사는 제지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유기물 관리지표가 COD에서 TOC로 전환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 특히, TOC 전환 시 환경부에서 용역사업을 통해 제지업의 폐수 처리 운영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제도 시행은 업종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규제도 강화되어 기업 부담이 증가

- 또한, 유기물 관리지표가 TOC 기준 변경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 규제는 더욱 강화
- 유기물 관리지표 전환에 따른 수질관리 기준 강화로 기업이 준비하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폐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단위 : mg/L)

구분	COD		⇒	TOC	
	1일 폐수배출량 2,000m³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m³ 미만		1일 폐수배출량 2,000m³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m³ 미만
청정지역	40 이하	50 이하		25 이하	30 이하
가지역	70 이하	90 이하		40 이하	50 이하
나지역	90 이하	130 이하		50 이하	75 이하
특례지역	40 이하	40 이하		25 이하	25 이하

□ 건의내용

- 청정지역 등 해당 지역에 업종별 총유기탄소량 특례 기준 마련

□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 현황 및 문제점

- 생태독성관리제도는 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 등이 생물체에 미치는 독성 정도를 물벼룩을 이용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1년부터 시행
 - 산업폐수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수 생물죽인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폐수 내에 염 농도가 높은 사업장일 경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움
 - 예외조항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이 염에 의한 경우라면 해양방류가 가능하나 염에 의한 독성이 증명될 경우에만 해당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 염에 의한 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독성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명해야 하며, 3년마다 연장 심사를 진행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음

*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 해외주요국은 생태독성 시험을 위해 물벼룩류 외 조류, 어류, 박테리아 등 다양한 개체를 통해 생태독성 시험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물 물벼룩만 활용하고 있어 염분 생태독성 실험에는 한계

<주요국 방류수 독성시험 시 사용하고 있는 시험 종>

구분	어류	물벼룩류	조류	박테리아
독일	○	○	○	○
영국		○	○	○
프랑스	○	○	○	○
이탈리아		○		○
뉴질랜드		○	○	○
한국		○		

* (출처) : 한국환경공단

- 물벼룩 등 담수 생물종을 활용하여 염농도를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염농도의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해양생물 시험종이 필요

현장예로사례

- K사는 자원 재활용업체로서 공정상 염화합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폐수는 해양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음
- 당사 폐수의 염농도가 담수보다 높아 물벼룩으로 생태독성을 평가할 경우 배출허용기준(TU2)을 초과하여 직접 방류가 어려움
- 염분을 제거하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가 있으며 3년마다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필요한 비용 부담 증가

□ 건의내용

- 폐수의 생태독성시험 평가시험종 다양화 필요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태종도 생태독성 평가 시험종에 포함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환경규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
 - 환경규제는 기업의 입지, 오염물질 배출, 원료사용, 폐기물 관리 등 기업활동 전반에 적용되고 다수의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행정기관의 과도한 서류 요구로 인해 기업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
 - 환경부·지자체·환경공단·화학물질안전원 등 각 행정기관별로 환경규제 이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별 기업은 혼자 각 기관별로 대응해야 어려움이 존재
 - 또한 SO_x, NO_x 등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농도와 총량 규제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비슷함에도 각 기관별로 규제 이행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
- 또한 행정기관의 현장 점검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장 점검시기도 기관별로 달라 기업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음
 - 현장 점검에 의한 행정조치가 개선명령보다는 조업정지·사용중지·허가취소·폐쇄명령 등 처벌위주의 단속 증가로 인한 어려움 발생

<환경법규 위반 조치사항>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선명령		1,155	1,328	1,436	1,117	1,321
제재명령		1,495	2,456	2,037	1,857	1,780
	조업정지	441	594	551	428	346
	사용중지	613	654	706	490	445
	허가취소	5	478	56	187	200
	폐쇄명령	355	609	576	644	629
	순수고발	81	121	148	108	160

*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현장애로사례

- L사는 대기오염, 수질, 소음 등 다양한 환경규제를 적용받은 기업으로서 오염물질별 규제 이행 서류를 행정기관별·행정기관 부서별로 요구하고 있고 사업장 점검도 기관별로 달라 각 행정기관별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 기업의 환경담당자는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행정기관 대응으로 인해 서류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 본래 환경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건의내용

- 환경규제 이행 서류 및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 대기·화학물질 등 동일오염물질 규제 이행서류 통합 제출
- 행정기관 사업장 점검 시 적발 위주 보다는 개선중심으로 점검